

27. 대구광역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19년 10월 2일
- 제출자 : 대구광역시장
- 회부일자 : 2019년 10월 8일
- 상정일자 : 제270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2019년 10월 16일),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이숨결 농업기술센터 소장)

☐ 제안이유

- 「대구광역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의 손해배상 규정이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이를 삭제하여 법률 적합성을 제고하고, 동시에 일부 부적절한 용어와 띄어쓰기를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지자체 면책 규정과 사용자 책임규정을 삭제함(안 제11조 및 제12조)
-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및 띄어쓰기 정비

3. 검토보고 요지(보고자 : 전문위원 하종선)

□ 개정취지

- 현행 「대구광역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에서 손해배상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손해배상 규정을 두고 있으나, 손해배상은 「국가배상법」 또는 「민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고 자치법규에서 면책 또는 책임을 정하는 것은 상위법령의 특례로서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이를 삭제하여 법률적합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적법성 여부

- 띄어쓰기 및 자구를 수정하고, 상위법(「지방자치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규정을 삭제하여 법률 적합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법체계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주요 검토사항

-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 안 제9조(임대료의 감면 등)는 제1항제1호의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띄어쓰기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수정하려는 것임.
- 안 제11조(임대계약의 취소)는 제1항제2호 중 ‘양도 또는 전대’를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로 자구 수정 및 어휘를 순화한 것임.

제2항은 제1항제1호~제4호*를 이유로 하는 계약 취소에 기인해 발생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해서는 시장이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으로, 이를 삭제하려는 것임.

* 참고(제11조제1항제1호~제4호)

제11조(임대계약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기간 중에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자가 임대 농기계를 농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2. 농기계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한 경우
3. 농기계를 영업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4.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5. 시장이 그 밖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취소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 안 제12조(농기계 사용자의 책임 및 변상)에서는 농기계 사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의 피해에 대해 사용자가 책임을 진다고 규정한 제4항을 삭제하려는 것임.
- 안 제17조(위원의 임기)에서는 ‘보궐위원’을 ‘새로 위촉된 위원’으로 수정하려는 것임.

□ 검토결과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에 위반될 소지를 없애기 위해 지자체 면책 규정과 사용자 책임규정을 삭제하고 일부 용어 및 띄어쓰기 등의 미비점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대구시의 농기계 임대료가 타 지자체보다 높은데, 추후 조례안 개정을 추진하여 관련 사항을 정비하기 바랍.	○ 노력하겠음.

5. 토론요지

○ 해당 없음.

6. 수정안 요지

○ 해당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출석위원 전원찬성)

8. 소수의견 요지

○ 해당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 없음.